

내재화된 위선?: '중국적 세계질서'의 현실주의적 재해석*

박 홍 서
(동덕여자대학교)

< 차례 >

- | | |
|--------------------------------|-----------------------------|
| I. 서론 | 1. 중국 중심의 패권안정과 주변 국가의 편승 |
| II. 중국적 세계질서의 개념과 그 방법론적 검증 전략 | 2. 동아시아의 세력변화와 중국적 세계질서의 실제 |
| III. '결과의 논리'와 중국적 세계질서 | |
| | IV. 결론 |

· **주제어:** 중국적 세계질서, 적합성의 논리, 결과의 논리, 한중관계, 조직화된 위선, the Chinese world order, logics of appropriateness, logics of consequences, Sino-Korean relations, organized hypocrisy

【한글초록】

중국적 세계질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국가간 공식적 위계와 조공국의 대내외적 자율성을 규정하는 전통적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이다. 이것은 사회구성원간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위계적 질서를 강조하는 유교적 관념이 국가간 관계로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적 세계질서의 규범은 실제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엄격히 준수되지 않았다. 중국적 세계질서의 대표적 사례인 한중관계에서도 정체성 정치보다는 세력관계의 비대칭성을 고려한 전략적 행태가 빈번하였다. 특히, 중국을 둘러싼 동아시아의 세력관계가 변화하는 시기에서 그러한 현실주의적 행태가 두드러졌다. 크래스너가 주장하듯, 베스트팔렌 조약의 주권 규범이 이후 서구 국제질서에서 준수되지 못하는 상황을 '조직화된 위선'이라 한다면, 중국적 세계질서 역시 규범과 실체가 괴리된 '위선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그러한 위선적 관계가 관념적인 유교이념에 기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내재화된 위선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 귀중한 논평을 해주신 신봉수 박사님, 최지영 박사님, 그리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I. 서론

1648년 30년 전쟁의 종결조약인 베스트팔렌 조약은 유럽에서 근대 국제질서가 출현하는 기점이 되었다. 30년 전쟁은 구교와 신교간의 종교전쟁이었으며 동시에 합스부르크 신성로마제국에 대한 프랑스의 도전이기도 하였다. 조약에 따라, 개별 국가들의 주권이 인정됨으로써, 유럽의 국제질서는 개별국가를 통제하는 권위체가 소멸되고 주권국가간의 평등한 관계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유럽의 국제정치에서 개별국가들이 모두 자국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했던 것은 아니었다. 전쟁에 따른 조약 등으로 개별 국가들의 주권은 반복적으로 제약 당했다. 1713년 위트레흐트(Utrecht) 조약이 프랑스-스페인 통합에 대한 프랑스의 자결권을 침해했고, 19세기초 나폴레옹 전쟁직후 신성동맹국들은 타국 공화파 세력의 확장을 저지하였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시기 독일 제 3 제국은 유럽각국에 자국 중심의 위계적 질서를 강요했으며, 전후 미소 양국은 미국식 민주주의 혹은 소련식 사회주의 체제를 강요하기도 하였다. 크래스너(Stephen D. Krasner)는 명목적 주권 규범이 이와 같이 실제와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주권 규범은 결국 “조직화된 위선(organized hypocrisy)”이라고 주장한다. 주권을 존중하라는 ‘적합성의 논리(logics of appropriateness)’는 국가이익 우선이라는 ‘결과의 논리(logics of consequences)’에 의해 무력화되어 왔다는 것이다.²⁾

이와 같다면, 중국-조공국가간 위계성과 조공국가들의 내적 자율성을 규정한 소위 ‘중국적 세계질서’는 실제와 부합하였는가? 그것은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또다른 위선적 관계인가 아니면 실제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운용 논리였는가? 최근 중국의 급속한 부상으로 중국 중심의 전통적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현실주의자들은 중국의 부상이 전통적인 동아시아 질서를 재현시키기 보다는 19세기 유럽 국가간 세력경쟁의 논리를 확대 재생산할 것으로 전망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급속히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 세력균형(balancing) 전략을 추구하고 그 결과 지역질서는 불안정해 질 것이란 주장이다.³⁾

이에 비해, 중국 중심의 안정적 동아시아질서가 재현될 가능성에 주목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강(David C. Kang)은 중국의 강대국화는 중국적 세계질서와 유사하게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오히려 안정화시키는 요인이라 주장한다. 주변국가들은 전통시기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중국에 대해 세력균형 전략이 아니라 편승(bandwagoning) 전략을 구사할

1) Paul Kennedy,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New York: Random House, 1987), pp. 31-41.

2) Stephen D. Krasner, “Rethinking the sovereign state model,”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7 (2001), pp. 17-42; idem, *Sovereignty: Organized Hypocris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1999), pp. 3-9.

3) Richard K. Betts, “Wealth, Power, and Instability: East Asia and the United States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18-3 (Winter 1993/94), pp. 34-77; Denny Roy, “Assessing the Asia-Pacific Power Vacuum,” *Survival* 37-3 (Autumn 1995), pp. 45-60; Aron Friedberg, “Will Europe’s Past Be Asia’s Future?” *Survival* 42-3 (January 2000), pp. 147-160.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란 것이다.⁴⁾ 반대로, 중국적 세계질서의 고유한 논리는 오히려 향후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갈등 심화를 초래시킬 수 있다는 시각 역시 존재한다. 전통적 조공관계의 논리는 현재의 동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평등한 협력관계보다는 스스로 역내 지배국이 되려는 부정적 욕구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⁵⁾ 한편, 전통적 동아시아질서 자체를 비판하는 논거도 존재한다. 이들에 따르면, 위계적인 중국적 세계질서는 관념적인 신화이며, 개별 국가들은 세력균형의 논리에 따라 갈등적 상호관계를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중국적 세계질서와 근대유럽의 국제관계는 결국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주장이다.⁶⁾

본 논문은 현실주의 시각에 기반해 중국적 세계질서의 논리 역시 근대 유럽의 주권 규범처럼 현실과 괴리된 국가간 위선적인 행동 원리라고 주장한다.⁷⁾ 특히, 안보 영역에서 중국과 주변국가들은 종주국과 조공국간 준수해야할 관념적 규범 및 정체성이 아니라 세력관계에 기초한 전략적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한다. 중국적 세계질서가 표면적으로는 서구 국제질서와 상이하더라도 그 실제 작동 원리는 결국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 전개를 위해, 논문의 2장에서는 중국적 세계질서를 설명하고 그것의 실재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론적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3장에서는 그 경험적 사례로 명·청 시기 한중관계의 안보 위기상황을 분석하며, 결론에서는 향후 전망 및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II. 중국적 세계질서의 개념과 그 방법론적 검증 전략

크래스너에 따르면, 국제정치에서 '조직화된 위선'은 '결과의 논리'가 '적합성의 논리'를 압도할 때 발생한다. 결과의 논리는 행위자가 결과의 합리적 수익계산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며, 적합성의 논리는 행위자가 정체성과 규범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정치의 조직화된 위선은 국가간 행동의 준칙으로서 정체성 및 규범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국가

4) David C. Kang, "Getting Asia Wrong: The Need for New Analytical Frameworks," *International Security* 27-3 (Spring 2003), pp. 57-85; idem, "Hierarchy, Balancing, and Empirical Puzzles in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Security* 28-3 (Winter 2003/4), pp. 165-180. 상당수 중국 학자들과 정책결정자들 역시 조화와 안정을 강조하는 중국적 세계질서의 논리를 세력균형에 기초한 갈등적 국제관계의 대안적 모델로 간주하고 있다. 柯崗安, "中國視野下的世界秩序: 天下, 帝國和世界," 『世界經濟與政治』 2008年 第10期, pp. 54-56.

5) 簡軍波, "中華朝貢體系: 觀念結構與功能," 『國際政治研究』 2009年 第1期, p. 142.

6) Amitav Acharya, "Will Asia's Past Be Its Future?" *International Security* 28-3 (Winter 2003/4), pp. 149-164; Yuan-kang Wang, "The Chinese World Order and War in Asian History," paper prepared for delivery at the annual meeting for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PSA) in Toronto, September 3-6, 2009.

7) 크래스너 역시 중국적 세계질서의 조직화된 위선성을 주장하나, 주로 19세기의 상황에 주목한다. 반면, 본 논문은 명청 시기 전반으로 그 연구 범위를 넓힌다. Stephen Krasner, "Organized hypocrisy in nineteenth-century East Asia,"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 Pacific* 1 (2001), pp. 173-197.

들이 실제로는 물질적 이해관계에 따라 전략적으로 행동할 때 발생한다.⁸⁾ 중국적 세계질서가 조직화된 위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전통적 동아시아 국제관계가 그 독특한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실제에서는 결과의 논리에 따라 좌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다면, 중국적 세계질서에서 개별 행위자들이 준수해야 할 적합성의 논리는 무엇인가? 페어뱅크(John King Fairbank)에 따르면, 중국적 세계질서는 유교라는 이념적 기반위에 구축되고 조공관계로 현실화된 국가간 위계적 관계라 할 수 있다. 주지하듯, 유교적 규범의 핵심은 ‘삼강(三綱)’으로 표현되는 행위자(군신간, 부부간, 부자간)간 태생적, 윤리적인 위계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계적 관계는 세력관계에 의해 물리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자혜’와 ‘섬김’의 의무가 관념적으로 내재화된 자발성에 기초한다.⁹⁾

중국적 세계질서는 이러한 개인간 위계적 관계를 국제정치로 확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중국적 세계질서는 물질적 이해관계를 떠나 조공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안전보장과 반대로 조공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복종이 관념적으로 내재화된 국제관계인 것이다. 중국은 책봉의 형식으로 조공국가의 정권을 승인할 권리와 조공국가의 안보위기사 보호해야 할 의무를 동시에 갖는다. 반면, 조공국가는 중국을 상국(上國)으로 섬기되 외교와 내정에 있어서는 자율성을 갖는다. 따라서, 중국적 세계질서는 식민지의 내적자율성이 부정되는 ‘제국체제’와 다르며, 또한 탈냉전기 미국 중심적 국제질서와 같은 비공식적 위계체제와도 다르다.¹⁰⁾ 1876년 강화도 조약 당시 이홍장(李鴻章)이 일본공사에 보낸 문서는 ‘속방이되 내정과 외교는 자율’이라는 중국적 세계질서의 핵심을 간결히 요약하고 있다.

“대개 조공을 실행하고 우리의 역법을 받들어 사용하는 것은 조선이 중국에게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고 돈과 양곡을 거두고 정사를 다스리는 것은 조선이 스스로 하는 것인바, 이것이 바로 속방의 실질내용이다. 그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그 나라의 분쟁을 풀어주며 그 나라의 안전을 기대하는 것이 중국이 조선에게 대하여 스스로 맡은 일이고, 그것이 바로 속방을 대하는 실질내용이다.”¹¹⁾

중국적 세계질서가 위선적이라면 결국 현실에서는 이러한 규범 대신 합리성에 기초한 전략적 행태가 지배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실제 중국적 세계질서는 중국과 주변국간의 힘

8) Krasner (2001), p. 19. 결과의 논리와 적합성의 논리에 대해서는 James G. March and Johan Olsen, “The Institutional Dynamics of International Political Orders,” *International Organization* 52 (1998), pp. 949-954 참조.

9) 중국적 세계질서의 개념에 관해서는 John, K. Fairbank, “A Preliminary Framework,” in John, K.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pp. 2-14; Mark Mancall, “The Chi'ing Tribute System: an Interpretive Essay,” in *Ibid.*, pp. 63-72; 김한규, 『천하국가: 전통시대 동아시아 세계질서』 (서울: 소나무, 2005); 이삼성,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1 (서울: 한길사, 2009), pp. 157-227; 何新华, “试析古代中国的天下观,” 『东南亚研究』 2006年第1期, pp. 50-54 참조.

10) 이삼성 (2009), pp. 163-168.

11) 권혁수, 『19세기말 한중 관계사 연구』 (서울: 백산자료원, 2000), p. 30.

의 물리적 비대칭성에 기반하며, 그 속에서 중국과 주변국가들은 국가이익에 대한 합리적 수익계산에 근거해 상호 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이 조공국에 대해 안전보장 의무를 회피한다거나, 조공국의 내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태가 그러한 경우이다. 조공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조공관계를 현실적 국가이익의 제고라는 차원에서 이용한다든가, 세력 관계의 변화에 따라 타 강대국에 편승함으로써 중국에 대해 균형전략을 취하는 행태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

이와 같다면, 중국적 세계질서가 실제로 결과의 논리에 따라 운용되었다는 주장은 어떻게 엄밀히 검증될 수 있는가? 그 경험적 사례로 어떠한 것들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를 위해 이론 검증의 문제에 있어 '가장 그럴 것 같은 사례(most likely case)'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가장 그럴 것 같은 사례는 이론적 주장과 가장 부합할 것 같은 사례로서 만약 이론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론의 설명력을 심각히 훼손시킬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¹²⁾ 따라서 중국적 세계질서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가장 그럴듯한 사례를 선택해 그 사례가 중국적 세계질서의 논리대로 전개되었는지를 판별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중국적 세계질서의 실재성은 심각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시기 한중관계는 중국적 세계질서의 가장 그럴 것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 중국적 세계질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심원 구조로 형성된다. 가장 안쪽원은 소위 "중화지역(sinic zone)"으로 조선, 베트남, 그리고 류구가 위치하며, 그 바깥원은 "아시아 내부지역(Asian inner zone)"으로서 유교문화의 공유 없이 조공관계를 이루는 몽골, 티벳 및 서북방 유목민족 등이 포함된다. 가장 바깥 원에는 무역관계시에만 일시적 조공관계를 형성하는 "외부 오랑캐"가 위치한다.¹³⁾ 따라서, 중화지역내의 한중관계는 중국적 세계질서의 실재성을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중국 중심의 조공체제가 명청 시기에 가장 일반화되었다는 사실은 한중관계에서도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시기가 그 핵심 사례임을 의미한다.¹⁴⁾

한편, 중국적 세계질서가 세력관계가 아니라 관념적 규범에 따라 운용된다면, 물질적 세력 관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그러한 관념적 규범이 준수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들은 안보위기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적합성의 논리보다는 결과의 논리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 구조적 현실주의(structural realism)에 따르면, 국가의 최고목표는 '생존' 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쟁상황에 직면한 국가들은 정체성이 아무리 다르

12) 이론 검증시 사례선정의 방식에 있어서, 가장 그럴 것 같은 사례 및 가장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례의 활용전략에 관해서는 Jack S. Levy, "Qualitative Methods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Frank P. Harvey and Michael Brecher (eds.), *Evaluating Methodology in International Studies* (Ann Arbor: The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2), pp. 143-145 참조.

13) Fairbank (1968), p. 2; 전해중, "「중국적 세계질서」에 관한 학술회의," 『역사학보』 제29집 (1965), pp. 161-166.

14) 중국적 세계질서가 명청시기에 "체계화"됐다는 주장은 전해중, "한중조공관계고: 한중관계사의 조감을 위한 토론," 『동양사학연구』 제1집 (1966); Hae-jong Chun, "Sino-Korean Tributary Relations in the Ch'ing Period," in *The Chinese World Order*, pp. 90-111 참조.

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기초해 ‘유사한’ 생존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¹⁵⁾ 예를 들어, 임진왜란기, 정묘/병자 호란기, 그리고 청일전쟁 시기 한중관계는 중국적 세계질서의 특수한 규범에도 불구하고 현실주의적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그러한 안보위기 상황에서조차 한중관계가 결과의 논리가 아닌 적합성의 논리에 따라 운용되었다면, 중국적 세계질서의 특수성이 단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다면, 임진왜란과 같은 위기상황을 제외하고 조선의 내적자율성이 보장되었다는 주장이나,¹⁶⁾ 일상적인 한중일간 사행제도를 근거로 전통적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서구 국제질서에 비해 독특하다는 주장,¹⁷⁾ 명칭의 쇠퇴시기를 제외하곤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부재하였다는 주장 등은 안보영역에서 중국적 세계질서의 독특성을 검증하는데 있어 방법론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¹⁸⁾ 다시 말해, 중국적 세계질서의 논리를 통해 전통시기 동아시아 국가간 안보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안보위기 상황에서도 그 독특성이 발현되었다는 것을 검증해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중국적 세계질서의 논리는 국가간 일상적이고 의례적 관계만을 설명할 수 있는 매우 제한된 범위의 논리일 수밖에 없다.

사실, 국제관계 이론의 맥락에서, 상술한 논의들은 상호 대립적인 구성주의(constructivism) 이론과 구조적 현실주의 이론중 어떤 것이 중국적 세계질서를 더욱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가에 관한 메타이론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¹⁹⁾ 주지하듯, 구성주의는 국제정치의 핵심변인으로 국가들의 관념적 정체성을 강조한다. 국가들은 자신의 행동이 정체성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행동(적합성의 논리)한다는 것이다. 반면, 구조적 현실주의는 독특한 관념을 갖는 국가들이라도 결국 물리적 세력관계의 유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동(결과의 논리)한다고 주장한다.²⁰⁾ 이렇다면, 중국적 세계질서는 구조적 현실주의에 비해 구성주의 이론의 예측에 보다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만약 구조적 현실주의가 구성주의에 비해 중국적 세계질서의 실재를 보다 엄밀히 분석해 낼 수 있다면, 현실주의 이론의 우월한 설명력이 보다 명확히 확

15)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9), pp. 127-128.

16) 이러한 주장은 이삼성 (2009), p. 186 참조.

17) 사행제도로 전통적 동아시아질서를 분석한 논문으로는 남궁곤, “동아시아 전통적 국제질서의 이해,” 『국제정치논총』 제43집 (3)호 (2003), pp. 7-31 참조.

18) 이러한 주장은 Kang (2003/4), pp. 175-176 참조.

19) 라카토스에 따르면, 이론의 설명력은 단순히 경험적 사실로 검증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쟁이론’에 비해 얼마나 더 그 경험적 사실을 잘 설명하는가의 여부로 판별된다. 따라서 이론 검증 과정은 이론, 경쟁이론, 그리고 사실간의 “3자대결(three-cornered fight)”일 수밖에 없다. 물론, 본 논문의 목적은 이론검증이 아니라 기존 현실주의 이론을 통해 중국적 세계질서를 분석하는 것이다. 라카토스의 논의는 Imre Lakatos,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 in Imre Lakatos and Alan Musgrave (eds.), *Criticism and the Growth of Knowled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p. 115 참조.

20) 구조적 현실주의와 구성주의 이론의 대립적 상호관계는 Alexander Wendt, *The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 29-33; Ronald L. Jepperson, Alexander Wendt, and Peter J. Katzenstein, “Norms, Identity, and Culture in National Security,” in Peter J. Katzenstein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pp. 33-75 참조.

인될 수도 있는 것이다. 3장에서는 현실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명청시기 한중관계의 실재를 검토한다.

Ⅲ. '결과의 논리'와 중국적 세계질서

1. 중국 중심의 패권안정과 주변 국가의 편승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적 세계질서에 대한 핵심적 논거중의 하나는 전통적 동아시아 질서에서 주변국가들이 위계적인 유교문화에 기반해 대중국 편승정책을 선호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역시 물리적 힘보다는 문화적 '매력공세(charm offensive)'를 통해 조공국가를 포용하고 안전보장을 약속하는 자혜적인 정치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중국적 세계질서에서는 국가간 분쟁보다 평화상태가 보다 보편적이었다고 주장된다.²¹⁾

물론,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는 경험적 반론도 적지 않다. 즉, 중국적 세계질서 역시 중앙권 위체가 부재한 무정부적 상황이었으며 그 결과 주변국가들은 대중국 편승전략보다 균형전략을, 중국 역시 군사력에 기초한 강압적 대외관계를 추구하였다는 것이다.²²⁾ 그러나 중국적 세계질서에서 대중국 세력균형이 실제로 부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서구의 국제질서와 근본적으로 다른 동아시아만의 특징이였는가의 문제 역시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그러한 중국적 세계질서는 유교문화에 내재된 특수성이 아니라 중국과 주변국가간 물리적 세력관계의 비대칭성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이다.

사실, 세력균형이론을 주장하는 월츠(Kenneth Waltz)조차 균형전략이 모든 국가간 관계에 도식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약소국의 입장에서라면 강대국과의 관계속에서 균형보다는 편승전략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²³⁾ 위협균형(balance of threat) 이론가인 월트(Stephen M. Walt)는 이를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약소국-강대국 관계에서는 힘의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약소국은 일반적으로 세력균형 대신 강대국에 대한 편승전략을 선택한다. 특히, 다른 강대국의 지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라든지 혹은 강대국이 특별히 위협적이지 않다면 약소국에게 편승전략이 보다 합리적이다.²⁴⁾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에 대해 주변 약소국들이 편승전략을 구사했다는 사실이 반드시 중국적 세계질서의 특수성을 입증해 주는 경험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경험적으로도 전통적 동아시아 질서 이외의 지역에서 패권 국가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편승이 빈번했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탈냉전 시기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자리매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

21) Kang (2003), pp. 57-85; David Shambaugh, "China Engages Asia: Reshaping the Regional Order," *International Security* 29-3 (October 2004), pp. 94-95.

22) Wang (2009), pp. 7-18.

23) Kenneth N. Waltz, "Structural Realism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25-1 (Summer 2000), pp. 37-38.

24) Stephe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pp. 29-31.

가들은 미국에 대해 균형전략보다 편승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또한, 고대 로마 중심의 세계질서에서도 로마 주변의 만족(barbarian) 소왕국들은 로마에 편승해 자국의 안보를 보장받고 또한 로마제국의 선진문화를 수용하기도 하였다.²⁵⁾

따라서, 중국적 세계질서에서 나타나는 팍스시니카(Pax Sinica)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에 기반하고 있다기보다는 비대칭적 세력관계를 핵심변인으로 하는 ‘패권안정(hegemonic stability)’ 이론의 전형적 사례라 할 수도 있다. 길핀(Robert Gilpin)이 주창한 패권안정론에 따르면, 국제관계의 평화는 국가들간 경쟁적 세력균형에 따른 것이 아니라 패권국가와 기타 국가들간의 심대한 힘의 비대칭성에 기인한다. 약소국들은 패권국가의 세력권에 편승하는 대가로 자국의 안보를 극대화하고 또한 패권국이 제공하는 공공재에 대한 사용권을 얻는다.²⁶⁾ 이렇다면, 중국적 세계질서 역시 중국 중심의 패권 안정 체제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일신라와 당, 고려와 송·원, 조선과 명·청의 위계적 관계는 비대칭적 세력관계 속에서 중국의 패권적 질서에 대한 한반도 국가의 편승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²⁷⁾

한편, 패권국의 쇠퇴는 일반적으로 과잉팽창에 따른 헤게모니 유지비용의 증가에 기인하기 때문에 패권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한 유지비용을 감소시키려 한다.²⁸⁾ 예를 들어, 국내적으로 세수를 확대하고 군사제도를 개선한다거나, 대외적으로는 차상위 강대국에게 국제질서 유지비용을 전가함으로써 과중한 공공재 제공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다. 페르시아의 부상에 직면한 로마가 3세기 중엽 이후 재정개혁을 통해 세수확대를 도모하고, 고트족을 제국방어의 파트너로 끌어 들었던 사실, 1차대전 직전 영국이 프랑스와의 관계개선(entente)을 통해 독일의 부상을 견제하려 했던 사실, 미국이 1969년 닉슨독트린을 발표해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의무를 축소하고 동아시아 헤게모니 유지를 위해 중국을 중요한 역내 파트너로 끌어 들었던 사실 등은 모두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부시 행정부가 2005년 9월 중국을 미국의 ‘이익상관자(stake holder)’로 규정하고 북핵문제와 같은 국제이슈에 대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구한 것 역시 헤게모니 유지비용을 감소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는 것이다.²⁹⁾

중화제국 역시 헤게모니 유지비용을 관리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행태를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한나라는 북방 흉노족에 대해 유화정책을 구사함으로써 점증하는 분쟁비용을

25) Michael Mastanduno and Ethan B. Kapstein, “Realism and State Strategies After the Cold War,” in idem, (eds.), *Unipolar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9), p. 5; 피터 히더 저, 이순호 역, 『로마제국 최후의 100년』(서울: 뿌리와 이파리, 2008), pp. 124-130.

26) Robert Gil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27) 중국의 압도적 국력이 주변국의 대중국 편승을 초래한 일차적 원인이란 시각은 簡軍波 (2009), p. 140 참조. 반면, 통일신라 이후 위계적 한중관계의 동인을 주로 문화 및 이념에서 찾는 논의는 이삼성 (2009), pp. 209-217.

28) 패권국의 쇠퇴는 과도한 군비지출과 아울러 기술확산 등으로 인한 후발국가들의 빠른 경제발전, 패권 질서에 대한 후발국가들의 무임승차 및 이로 인한 패권국의 재정 위기 등에 기인한다. Gilpin (1981), pp. 156-185.

29) Gilpin (1981), pp. 186-197; 피터 히더 (2008), pp. 94-106; 박홍서, “탈냉전기 중미간 ‘협조체계’의 출현?: 9.19 공동성명 후 북핵문제에 대한 중미간 협력,” 『국제정치논총』 제47집 (3호) (2007), pp. 82-84.

축소 관리하였으며, 보다 소극적으로는 만리장성 남방을 지리적 세력권으로 규정해 흉노족과의 분쟁 자체를 회피하려 하였다. 한 이후에도 북위와 명이 만리장성을 재구축했던 이유 역시 북방민족과의 과중한 분쟁비용을 관리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³⁰⁾ 사실, 중국이 만리장성을 경계로 자국의 과잉팽창을 관리했던 것은 로마가 1세기경 라인강 및 도나우강을 경계로 제국의 세력권을 한정했던 것과 유사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병참의 편리성과 더불어 강 넘어 겨르만 지역의 열악한 지리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세력확장을 추구할 현실적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³¹⁾

한편, 쿠빌라이(세조)가 1271년 당의 국가체제를 수용해 대원제국을 수립한 이후, 고려를 부마국으로 승격시켜 남송 및 일본 정벌에 군사력을 분담케 하였던 사실도 상술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³²⁾ 뿐만 아니라, 명조가 1433년을 끝으로 정화의 해외 원정을 중단시킨 것도 과잉팽창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를 방지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북방에서 몽골의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해외 원정은 현실적 효용이 없는 “값비싼 사치(expensive luxury)”에 불과했던 것이다.³³⁾ 이외에도 명조가 월남, 조선, 그리고 티벳 등으로부터의 조공을 거부하거나 조공의 횡수 및 규모를 엄격히 제한했던 사실도 조공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려 했던 의도로 볼 수 있다.³⁴⁾ 제국의 과잉팽창뿐만 아니라 제국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과잉편승’ 역시 헤게모니의 유지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조공규모를 제한하려 했던 명의 행태는 현실주의적 이해관계를 반영한다.

이와 같다면, 중국적 세계질서내의 국가간 관계 및 행태는 유교 규범이라는 적합성의 논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힘의 비대칭성에 기인한 결과의 논리에 따라 보다 더 간결히 설명될 수 있다. 월츠에 따르면, 속성이 다른 국가들이 유사한 행태를 보인다면 그 원인은 그들의 상이한 정체성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환경(구조)이 된다.³⁵⁾ 따라서, 여타의 패권적 세계질서에서도 중국적 세계질서와 유사한 국가간 행태가 보편적이었다는 사실은 중국적 세계질서가 독특한 정체성에 기반해 전개되었다는 주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2. 동아시아의 세력변화와 중국적 세계질서의 실제

중국적 세계질서는 관념적 적합성의 논리에 기반한 중국-조공국간 위계적 국제관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물리적 세력관계의 변화에 기인한 안보위기 상황에서도 행위자들이 그러한 관념적 논리에 따라 행동했다면 중국적 세계질서의 독특성은 단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명칭

30) 김한규, 『천하국가: 전통시대 동아시아 세계질서』 (서울: 소나무, 2005), pp. 228-231; 이삼성 (2009), pp. 177-180.

31) 피터 히더 (2008), pp. 89-93.

32) 보르지기다이 에르데니 바타르, 『팍스몽골리카와 고려』 (서울: 혜안, 2009), pp. 68-73.

33) Kennedy (1987), p. 7.

34) 김한규, “임진왜란의 국제적 환경: 중국적 세계질서의 붕괴,” 정두희 편,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서울: 휴머니스트, 2007), pp. 307-313.

35) Waltz (1979), p. 72.

시기 한중관계의 대표적인 안보위기 상황으로는 16세기말 임란기, 17세기초 호란기, 그리고 19세기말 청일전쟁 시기를 들 수 있다.³⁶⁾

1) 16세기말 일본의 부상과 조-명 관계

임진왜란기 동아시아 국가간 세력관계 변화는 중국적 세계질서 속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세력변화라 할 수 있다. 16세기 말 명은 대외적으로 몽골과 왜구(北虜南倭)로부터의 위협이 가중되고, 내부적으로는 재정위기 및 반란 등 국가 쇠퇴의 전형적인 징후들을 나타냈다. 반면, 일본은 오다 노부나가에서 시작된 통일전쟁과 국가정비를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완수하면서 급속히 세력을 확장하였다. 임진왜란은 명일간 세력전이 속에서 일본이 가도입명(假道入明)을 명분으로 조선을 침공함으로써 발발하였다.³⁷⁾

중국적 세계질서의 적합성의 논리에 따르면, 중국은 이러한 조선의 안보위기에 대해 자국의 현실적 국가이익과 상관없이 '자혜적인' 군사지원을 해야 할 중주국으로서의 의무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발발 전후 중국의 대조선 정책은 적합성의 논리가 아니라 결과의 논리에 기반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우선, 명은 임란직전 일본의 급성장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조선 및 류구를 이용해 대일본 예방전쟁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패권안정론이 주장하듯 패권국가가 동맹을 이용해 적은 비용으로 안보위험을 제거하려는 전략적 행태라 할 수 있다. 탈냉전기 미국이 한미일 동맹강화를 통해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행태와 유사한 것이다.³⁸⁾

1592년 4월 일본군이 부산포에 상륙후 빠르게 북진하는 상황에서도 명은 전황의 추이에 따라 군사지원을 결정하는 전략적 행태를 보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명은 한반도 분쟁으로의 과도한 연루(entrapment)와 조선으로부터의 방기(abandonment) 가능성 모두를 우려하였다.³⁹⁾ 예를 들어, 선조가 의주에서 중국으로의 망명(內附)을 요청하자 명은 내부할 인원과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였는데, 이것은 한반도 분쟁으로 초래된 자국의 전략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행태였다.⁴⁰⁾ 아울러, 명은 왜군이 빠르게 북상하자 조선-일본간 결탁가능성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최세신(崔世臣) 등을 파견해 조선의 배신 가능성 역시 차단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행태는 조선이 명을 방기하고 도전국가인 일본에 편승할 것에 대한 현실적 우려의 소산이었던 것이다.⁴¹⁾

36) 이전 사례로 14세기말 원·명 교체기를 들 수 있다. 원명교체기에도 고려가 현실주의적 안보 논리에 따라 각각 '대명화외론'과 '요동선제공격론'을 숙고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정용화, "조선의 조공체제 인식과 활용,"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7집 2호 (2006), pp. 16-18 참조.

37) 임진왜란기 동아시아 세력변화는 박홍서, "신현실주의 이론을 통한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 연구: 1592년, 1627년, 1894년, 그리고 1950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1호 (2006), p. 167 참조.

38) 명의 대일본 예방전쟁 계획은 『선조실록』 25년(1592) 6월 갑인 참조. 이론적 설명은 Gilpin (1981), pp. 191-193 참조.

39) 동맹간 연루-방기 딜레마에 대해서는 Glenn H. Snyder,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36-4 (July 1984), pp. 466-468 참조.

40) 『선조실록』 25년(1592) 7월 신유.

41) 『선조실록』 25년(1592) 5월 무자; 6월 계사.

이후, 명의 실제적인 대조선 군사원조도 종주국으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방어나는 전략적 사고 속에서 이루어졌다. 명의 상당수 관료들은 중국안보에 대한 조선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조선 파병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명의 사신 설번(薛藩)이 본국에 보고한 바와 같이, “요양과 천진에 해가 없었던 것은 조선이 울타리처럼 막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⁴²⁾ 결국 명은 1592년 7월 평양성에서 일본군과 최초의 전투를 벌이지만 대패하면서 12월 보다 큰 규모의 원군을 파병하기에 이른다. 특히, 평양성 패배 이후 명은 조선의 거듭되는 원병지원을 묵살하면서 국내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추가 파병시기를 결정하는 전략적 행태를 보였다. 당시 영하지방에서 발생한 반란으로 조선으로의 추가파병이 어렵게 되자 9월 일본과 강화회담을 통해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려 했던 것이다. 결국 영하의 난이 진압되면서 이여송(李如松)을 사령관으로 하는 대규모 추가원병이 12월 파병되어 평양성 전투에서 일본군에 승리하였다.⁴³⁾

명군은 평양성 전투 승리이후 조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확전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드러내었다. 특히, 1593년 2월 벽제전 패배 이후 명군은 소극적인 군사대응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명군은 행주산성 전투에서 항전한 권율에 패문을 보내 일본군에 대한 공격을 비난하고 추가 공격을 금지시키기도 하였다. 조선으로서는 이러한 명의 행태를 결코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전투태세를 명군 지도부에 요구하였으나 번번이 거부당했다.⁴⁴⁾ 명의 입장에서는 일본군의 북진을 한반도의 지정학적 최후선인 평양에서 방어한 이상, 조선의 지속적인 대일 공세로 인해 자국의 연루가 심화되는 것을 회피하려 했던 것이다.

명의 현실주의적 행태는 1597년 정유재란이 발발하면서 보다 극명히 나타났다. 명군은 소극적인 전투태세를 견지하면서 일본군과의 전투보다는 강화를 통한 종전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한편으로 명 내부에서는 대조선 ‘직할통치론’이 제기되는 등 조선을 보다 강력히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명-일간 강화에 반발하는 조선의 행태는 명에게 전략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명은 조선에 대한 식민통치를 기도함으로써 일본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려 했던 것이다.⁴⁵⁾

이러한 중국의 행태는 중국적 세계질서가 규정하는 조공국에 대한 중국의 자혜적 보호 의무와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명은 자국의 행태를 조선에게 현실주의적 이라고 인식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순망치한의 논리를 내세워 원병을 요청하는 조선에 대해 명의 군사지원은 “속국에 대한 황제의 은혜”일 뿐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던 것이다.⁴⁶⁾ 이러한 불만은 종주국으로서 준수해야할 규범이 실제 행태와 부합하

42) 『선조수정실록』 25년(1592) 9월 정사; 최소자, 『명청시대 한중관계사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7), pp. 26-29.

43) 『선조실록』 25년(1592) 9월 을축; 10월 임진; 김한규, 『한중관계사Ⅱ』 (서울: 아르케, 1999), p. 611.

44) 명의 자의적 강화와 명-조선의 갈등은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서울: 역사비평사, 1999), pp. 42-55 참조. 권율에 패문을 보낸 것은 『선조실록』 26년(1593) 3월 계미 참조. 명의 적극적 공세를 희망하는 조선의 입장은 『선조실록』 26년(1593) 2월 임인/계축; 3월 을축; 6월 기해 참조.

45) 한명기 (1999), pp. 61-67.

46) 『선조실록』 26년(1593) 1월 신유; 한명기 (1999), pp. 40-42.

지 않는 것에 대해 명 스스로 매우 민감하게 인식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17세기초 후금의 부상과 조-명관계

임진왜란기 명-일간 세력변화가 조명관계의 현실주의적 측면을 부각시켰다면, 정묘·병자 호란기 후금의 부상으로 인한 명-후금간 세력변화 역시 한중관계의 현실주의적 논리를 노출시켰다. 1583년 이후 만주지역에서 누루하치의 건주여진이 기타 여진족을 통합하면서 후금 세력은 급속히 팽창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임진왜란기 조선에 대한 과도한 군사지원으로 명의 쇠퇴가 가속화되는 상황은 후금의 세력 확대에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결국 누르하치는 1616년 후금을 건립하고, 1618년 ‘칠대한(七大恨)’을 명분으로 대명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명은 조선과의 연합군을 구축해 1619년 대후금 전쟁(살리호薩爾滸 전투)에 돌입하였다.⁴⁷⁾

이러한 상황속에서 조선은 대명 군사지원 문제를 둘러싸고 임란기 명의 행태와 유사하게 매우 전략적으로 행동하였다. 조선은 조공국으로서 준수해야 할 규범적 의무가 아니라 원병에 따르는 현실적 이해득실에 근거해 대명 군사지원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당시 광해군 정권은 임란 이후 조선의 피폐해진 경제력 및 군사력 등을 이유로 명의 파병요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명과 보수적 관료들의 강력한 요구로 결국 군사지원을 결정한 상황에서도 향후 후금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전략적 행태를 보였다. 예를 들어, 1619년 2월 강홍립을 사령관으로 한 조선의 원병은 후금과의 전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 집단적으로 투항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살리호 전투 이후에도 조선은 명의 거듭된 재파병 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조선의 전략적 중요성을 거론하면서 명의 군사지원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다.⁴⁸⁾

조선의 이러한 행태는 명-후금 전쟁에 과도하게 연루됨으로써 역대 도전국가인 후금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전략적 사고의 결과였다. 임진왜란기 명이 1593년 1월 평양성 전투 이후 조선의 도발적인 대일본 공세를 차단함으로써 한반도 전쟁으로의 과도한 연루를 차단하려던 상황과 동일한 맥락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명의 입장에서는 조공국 조선의 소극적인 군사 지원 태도는 용인될 수 없었다. 더욱이 명은 강홍립의 투항이후 조선과 후금의 결탁 가능성을 우려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후금이 조선의 해군력을 이용해 명의 내지를 침공하는 상황은 명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였다. 당시 명 내부에서 조선에 대한 강력한 개입정책인 ‘조선감호론(朝鮮監護論)’이 제기된 것은 조선의 이러한 배신가능성을 우려한 전략적 사고의 결과라 할 수 있다.⁴⁹⁾ 서광계(徐光啓) 등이 제기한 조선감호론은 사신을 파견해 조선을 ‘선유(宣諭)’하고 감호함으로써 중주국-속방간 “군신의 대의”를 재확인하고 임란기 명의 원병에 보답케 하자는 것이었다.⁵⁰⁾

47) 박홍서 (2006), p. 168; 김한규 (1999), pp. 622-623.

48) 명의 파병요구와 조선의 미온적 태도는 한명기 (1999), pp. 244-280 참조. 강홍립에게 소극적인 전투태세를 견지할 것과 후금과의 사전소통을 지시한 광해군의 행동은 『광해군일기』 11년(1619) 2월 정사/4월 신유 참조.

49) 한명기 (1999), pp. 266-272; 김한규 (1999), pp. 624-625.

50) 『광해군일기』 11년(1619) 10월 임자.

이러한 조선감호론은 임란기 대조선 직할통치론과 유사한 전략적 논리에 기반하고 있었다. 내용적으로 그 차이가 있다면, 임란기 직할통치론이 조선의 호전적인 대일 정책을 통제해 명의 연루가능성을 낮추려는데 있었다면, 반대로 호란기 조선감호론은 조선의 대후금 편승을 차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물론, 조선감호론은 중국을 사대하되 내정에 있어서는 자율성을 규정한 중국적 세계질서의 규범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인조반정(1623)에 대한 명의 초기 대응에서도 이러한 전략적 행태를 엿볼 수 있다. 인조반정을 주도한 서인세력은 반정의 명분을 광해군의 '폐모살제(廢母殺弟)' 뿐만 아니라 임란기 명의 은혜, 즉 소위 '재조지은(再造之恩)'을 무시하고 후금과 교통한 잘못에서 찾았다.⁵¹⁾ 따라서, 인조정권은 반정에 대한 명의 신속한 승인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명은 조선의 기대와 달리 미온적 태도를 보이다 결국 1625년 1월에 가서야 인조정권을 승인하였다. 이러한 명의 소극적 태도는 인조정권의 불확실한 대후금 정책에 대한 우려에 기인하였다. 반정 직후 인조정권의 성격을 확실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반정세력의 대후금 편승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이다. 이후 명은 승인문제를 이용해 조선의 친명노선을 보다 강화케 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인조정권이 반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협력적인 대명외교를 구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⁵²⁾

한편, 명-후금간 세력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인조정권은 오히려 중국적 세계질서의 규범에 보다 충실한 구성주의적 행태를 보였다. 사실, 반정의 핵심이유를 명에 대한 광해군의 '배은망덕'으로 규정한 이상 인조정권의 친명노선은 예견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후금과의 관계 악화를 초래하였으며, 1627년 후금은 결국 조선을 침공(정묘호란)하였다. 더욱이 1636년 후금의 재침공(병자호란) 때까지 적합성의 논리에 기반한 인조정권의 대명·대후금 정책은 보다 강화되기까지 하였다. 조선은 명청간 세력전이를 무시하고 명의 신하로서의 대의를 강조하면서 후금에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였다. 급기야 조선은 1636년 칭제(稱帝) 후 사대를 강요하는 후금의 요구를 거부하고 전쟁까지 불사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⁵³⁾

그러나 적합성의 논리에 기반한 조선의 대후금 강경노선은 결국 막대한 현실적 비용을 초래하였다. 조선이 중국적 세계질서의 구성원으로서 갖는 정체성을 견지했다 하더라도 후금의 침공과 그에 따른 국가 전 부문에 걸친 현실적 폐해는 막대하였다. 월츠가 강조하듯,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들은 현실주의적 생존전략을 거부할 수도 있으나 그 부정적 결과마저 회피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⁵⁴⁾

51) 『인조실록』 1년(1623) 3월 갑진. 재조지은에 관해서는 최연식, “조공체제의 변동과 조선시대 중화-사대 관념의 굴절,” 『한국정치학회보』 41집 1호 (2007), pp. 110-111 참조.

52) 한명기 (1999), pp. 338-352.

53) 『인조실록』 14년(1636) 2월 병신; 6월 병인; 8월 신유. 호란기 인조정권의 관념적인 대명·대후금 정책을 일종의 '집단사고(group thinking)'의 결과로 보는 시각은 박현모, “10년간의 위기: 정묘-병자호란기의 공론정치 비판,” 『한국정치학회보』 37집 2호 (2003), pp. 36-38 참조.

54) Waltz (2000), p. 37.

3) 19세기말 일본의 부상과 조-청 관계

19세기 중후반 청일간 세력전은 중국적 세계질서 속의 또다른 세력변화였다. 특히, 16-17세기 명일간, 명청간 세력변화가 중국적 세계질서의 내부적 변화라면, 19세기말 청일간 세력전은 중국적 세계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세력변화이기도 하였다. 청은 18세기 후반 이후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 팔기군 체제의 악화, 그리고 백련교도 및 태평천국의 반란과 같은 왕조 쇠퇴의 전형적 징후들을 나타내었다. 특히, 1840년 아편전쟁을 기점으로 한 소위 “서구의 충격”은 청의 쇠퇴를 보다 가속화시켰다. 반면, 일본은 1868년 메이지유신을 통해 막부체제를 붕괴시키고 천왕중심의 근대 국가체제 건설을 가속화하였다. 메이지 세력은 근대행정구역, 헌법, 의무교육, 의회 등을 도입함으로써 근대 국민국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아울러 해군력을 중심으로 국방력을 급속히 증진시켰던 것이다.⁵⁵⁾

이러한 청일간 세력변화 속에서 일본의 대조선 세력팽창에 대한 청의 대응은 중국적 세계질서의 실재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세력확장은 시기적으로 1876년 강화도조약에서 시작되어 1895년 시모노세키조약으로 종결되었다. 두 조약 모두 제 1조로 “조선은 자주독립국”임을 명시하고 있었지만 강화도조약의 규정이 명분적이었다면 시모노세키조약의 그것은 실제적이었다.⁵⁶⁾

일본의 조선에 대한 세력확장에 대해 청은 조선문제로의 과도한 연루와 반대로 조선의 일본에 대한 편승을 모두 차단하려는 현실주의적 행태를 보였다. 우선, 강화도 조약이 조청간 조공관계를 부인하고 또한 불평등 조약으로서 조선의 이익을 침해함에도 불구하고, 청은 오히려 조선의 대일본 수교통상을 권고하였다. 청은 “조선은 자주독립국”이란 조항을 명분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조일간 분쟁 격화로 초래될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려 했던 것이다.⁵⁷⁾ 사실, 이러한 청의 행태는 병인양요(1866)와 신미양요(1871) 당시에도 나타났었다. 당시 프랑스와 미국은 조선의 종주국인 청에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청은 “조선은 청의 속국이지만 일체의 국사는 자주”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였던 것이다. 비록 청이 ‘속국자주’라는 중국적 세계질서의 규범을 들어 거부하긴 하였으나, 조선과 서구 열강과의 분쟁에 과잉 연루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전략적 행태라 할 수 있다.⁵⁸⁾

또한, 강화도조약 이후 일본의 대조선 세력확대가 심화되자, 청의 현실주의적 행태는 보다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1882년 발생한 임오군란에 대한 청의 대응은 그 전형적 사례였다. 청은 임오군란이 발생하자 신속히 개입해 그 배후로 지목된 대원군을 중국으로 압송하였다. 대원군의 호전적인 대일정책으로 인해 초래될 지 모를 청일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전략적 의도의 결과였던 것이다.⁵⁹⁾ 당시 조선의 관료들이 대원군 압송을 조공관계의 규범에 반하

55) 청일간 세력변화는 박홍서 (2006), pp. 168-169 참조.

56) 金天, “‘华夷观’对古代中韩关系的影响探究,” 『社会纵横』 2008年 第5期, p. 84. 각 조약의 내용은 성황용, 『근대동양외교사』 (서울: 명지사, 1993), pp. 146, 241-242 참조.

57) 권혁수 (2000), pp. 26-27.

58) 오카모토 다카시 저, 강진아 역, 『미완의 기획, 조선의 독립』 (서울: 소와당, 2009), pp. 93-95.

59) 대원군으로 인한 일본과의 분쟁가능성에 대한 이홍장의 우려는 William Francis Mannix (ed.), *Memoreis of Li Hung Chang*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13), pp. 253-54 참조.

는 것이라 비판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⁶⁰⁾

특히, 청의 대조선 개입정책은 1884년 조선개화파의 반청 쿠데타인 갑신정변 이후 보다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청은 우선 일본과의 친진조약(1885)을 통해 조선으로부터 양국 군대의 공동 철병을 약속함으로써 일본의 대조선 세력팽창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였다. 아울러 조선에 대해서는 원세개(袁世凱)를 파견해 청일전쟁기까지 강력한 내정간섭을 시도하였다.⁶¹⁾ 원세개는 “조선이 중국을 버리고 다른 강대국에 편승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 다른 이의 보살핌을 받는 것과 같다”는 기존 조공관계의 논리로 중국의 보호를 정당화하였다. 아울러, 조선이 청을 배반할 경우 신속한 군사개입을 통해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함으로써 조선을 통제하려는 보다 강압적인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다.⁶²⁾ 실제로, 청은 소위 ‘조러밀약’ 사건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조선의 외국인 고문이었던 뮐렌도르프가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청의 세력을 견제하려는 1차 조러밀약 사건(1885)이 발생하자, 청은 신속히 개입해 뮐렌도르프를 사임시켰다. 또한, 고종이 러시아에 보호를 요청했다는 2차 조러밀약(1886) 사건이 발생하자 원세개는 고종의 폐위까지 주장하기도 하였다.⁶³⁾

이러한 청의 적극적인 조선 내정간섭은 임란기 명의 직할통치론과 호란기 조선감호론이 담론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선은 중국의 조공국이되 내정과 외교는 자주”라는 중국적 세계질서의 규범을 중국 스스로 위배한 것이었다. 즉, 19세기 말 청의 대조선 개입정책은 당시 서구 국가들의 식민지 지배와 유사한 제국주의적 행태라 볼 수 있는 것이다.⁶⁴⁾ 결국, 1895년 청일전쟁의 결과로 한중간 조공체제가 붕괴됨으로써, 중국과 한국 모두 피상적으로나마 준수해야 했던 중국적 세계질서의 규범 자체가 소멸되기에 이른다.

IV. 결 론

중국적 세계질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국가간 공식적 위계와 조공국의 내적자율성을 규정하는 전통적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구성원간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위계적 질서를 강조하는 유교적 관념이 국가간 관계로 확대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중국적 세계질서의 규범이 실제 동아시아 국가간 안보관계에서 엄격히 준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적 세계질서의 대표적 사례인 한중관계에서조차 관념적 정체성보다는 물질적 세력관계에 기반한 상호간 전략적 행태가 빈번하였던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 세력관계가 급변하는

60) 오카모토 다카시 (2009), pp. 133-135.

61) 원세개를 통한 강력한 대조선 개입정책은 권혁수 (2000), pp. 197-269 참조.

62) 『고종실록』 23년(1886) 7월 29일 경신.

63) 오카모토 다카시 (2009), pp. 155, 161-162. 크래스너는 19세기 조선이 양반 사대부 계급의 국내정치적 정당성확보를 위해 중국적 세계질서의 규범에 보다 충실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신정변 및 조러밀약사건에서 보여지듯 조선 역시 중국의 세력권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적 행태를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크래스너의 논의는 Krasner (2001), pp. 182-192 참조. 19세기 말 조선의 전략적 행태는 정용화 (2006), pp. 20-21 참조.

64) 정용화 (2006), pp. 14-15.

안보위기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으로 인한 분쟁연루와 또한 한국의 배반가능성을 강력히 통제하였으며, 조선 역시 중국의 보다 적극적 지원을 요구하거나 광해군 시기와 같이 중국에 대한 복종의무를 회피하려는 전략적 행태를 보였다.

이와 같다면, 중국적 세계질서는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서구 국제질서와 유사한 국가간 ‘위선적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위선이 관념적인 유교이념에 기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내재화’되었을 뿐이었다. 사실, 서구 국제질서의 주권규범은 국가간 세력균형 정치와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이 주권에 기반한 국가간 평등을 강조한 것은 각 국가들이 초국적 권위체가 부재한 무정부상황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각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자조(self help)’의 원칙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국가간 세력관계에 민감히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⁶⁵⁾ 이에 비해, ‘부자관계’를 규정하는 중국적 세계질서속에서 현실적인 국가이익에 따라 전개되는 국가간 관계를 추론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중국적 세계질서의 실제에서 현실주의적 행태가 빈번했다는 사실은 결국 중국적 세계질서가 서구 국제질서에 비해 ‘더욱 위선적인’ 국가간 관계라는 것을 암시한다.⁶⁶⁾

물론, 이것은 중국적 세계질서가 서구 국제질서와 모든면에서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간 위계성을 규정한 규범이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국가간 관계에서 준수되었다는 사실은 근대 유럽의 국제질서와 분명 다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특수성이 과연 국가간 안보위기 상황에서도 표출되었는가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중국적 세계질서의 적합성의 논리가 안보영역에서 실제로 발현되지 않았다면, 현재 중국의 부상과 그것이 초래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상황을 설명하는데 있어 전통적 동아시아 질서가 갖는 함의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국제관계 이론의 측면에서도 중국적 세계질서에 관한 경험적 사실들은 중요한 함의를 제공해 준다. 특히, 중국적 세계질서를 현실주의 국제관계이론으로도 충분히 설명가능하다면, 이것은 중국적 세계질서에 대한 연구과정에서 흔히 강조되는 “동아시아 예외주의(East Asian exceptionalism)”를 비판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⁶⁷⁾ 프랑크(Andre Gunder Frank)가 강조하듯, ‘예외주의’에 기반한 지역연구는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라는 연구대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⁶⁸⁾ 이렇다면, 중국적 세계질서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특수성에 대한 과도한 주장이나 기존이론의 도식적 적용을 모두 경계하면서 지역적 경험을 토대로 기존 이론의 세련화를 도모할 수도 있는 것이다.⁶⁹⁾

중국적 세계질서가 실제로 ‘결과의 논리’에 따라 운용되었다면, 이것은 또한 향후 동아시아

65) Waltz (1979), p. 88, 93, 97.

66) 이와 달리 중국적 세계질서가 서구 국제질서에 비해 “덜 위선적”이라는 주장은 이삼성 (2009), p. 175 참조.

67) 이에 대한 강(Kang)의 논의는 다소 모순된다. 그는 2003년 논문에서 전통적 동아시아 질서는 서구 중심적 현실주의의 이상사례로 새로운 이론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했으나, 2003/4년 논문에서는 기존의 패권안정이론 혹은 세력전이이론으로 설명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68) 안드레 군더 프랑크 저, 이희재 역, 『리오리엔트』(서울: 이산, 2004), p. 519.

69) Acharya (2003/4), p. 163. 엔쉐통(閻學通)은 중국의 전통사상을 기반으로 기존 국제관계이론의 세련화를 모색하는 대표적인 중국 학자이다. 문정인, 『중국의 내일을 묻다』(서울: 삼성경제연구소,

국제질서에 대한 전망 및 정책결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급속한 부상에 따라 중국이 향후 위협적일 것인가를 둘러싸고 상반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적 세계질서 속에서 한반도가 분쟁상황에 직면했던 것은 중화세력의 부상이 아니라 그 쇠퇴였다는 근거를 들어 현재 중국의 부상이 위협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들이 제기되고 있다.⁷⁰⁾ 그러나 중국이 연관된 동아시아 세력변화 속에서 한반도는 주기적으로 안보위기에 직면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그 세력변화의 주체가 한족의 중국이든 이민족의 중국이든, 또한 일본과 같은 또다른 강대국이든 그들은 공통적으로 자국에 대한 한국의 편승을 강제하였던 것이다. 그 과정은 대부분 폭력성을 내포했으며, 일단 조선을 자신의 세력권으로 편승시킨 이후에는 중국적 세계질서의 규범을 차용해 비대칭적 세력관계를 정당화하기도 하였다. 17세기 초 후금이 조선의 편승을 강제한 이후 중국적 세계질서의 규범을 대조선 관계에 적용했던 것이 그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의 급속한 부상으로 인해 향후 미중간 세력전이가 현실화된다면, 한국의 대외 환경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현재 경제발전을 위한 안정적 대외환경을 위해 '화평발전'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미국은 '이익상관자' 개념을 통해 중국에게 국제문제의 해결 비용을 분담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중간 협조체제가 양국간 세력전이가 실제로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지속될 수 있는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현실주의의 논리에 따르면, 중국은 국력에 걸맞게 미국 주도의 헤게모니 질서를 수정하려는 도전국가의 행태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⁷¹⁾ 결국 중국은 17세기 후금과 19세기말 일본과 같이 한반도를 자국의 세력권으로 편승시키려는 강제성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다면, 한국의 향후 대중국 정책 역시 미중간 세력관계의 변화에 대한 엄밀한 분석에 기초해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헤게모니가 지속되는 이상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아울러 그것이 한중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관념적 적합성의 논리에만 기반해 한미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향후 대중국 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17세기 초 광해군 정권의 대후금 '기미정책'과 이후 인조정권의 '친명배금정책'이 각각 조선의 국익에 어떠한 상반된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한 엄밀한 판단은 21세기 한국의 외교정책결정에 있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2010), pp. 41-69.

70) 중국위협론은 논리적, 경험적으로 오류라는 주장은 이삼성 (2009), pp. 220-224.

71)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미중간의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01), pp. 373-377.

참 고 문 헌

『고종실록』

『광해군일기』

권혁수. 『19세기말 한중 관계사 연구』 서울: 백산자료원, 2000.

김한규. 『한중관계사Ⅱ』 서울: 아르케, 1999.

_____. 『천하국가: 전통시대 동아시아 세계질서』 서울: 소나무, 2005.

_____. “임진왜란의 국제적 환경: 중국적 세계질서의 붕괴.” 정두희 편.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서울: 휴머니스트, 2007.

남궁 곤. “동아시아 전통적 국제질서의 이해.” 『국제정치논총』 제43집 3호, (2003).

문정인. 『중국의 내일을 묻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0.

박홍서. “신현실주의 이론을 통한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 연구: 1592년, 1627년, 1894년, 그리고 1950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1호, (2006).

_____. “탈냉전기 중미간 ‘협조체제’의 출현?: 9.19 공동성명 후 북핵문제에 대한 중미간 협력.” 『국제정치논총』 제47집 3호, (2007).

박현모. “10년간의 위기: 정묘-병자호란기의 공론정치 비판.”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2호, (2003).

보르지기다이 에르레니 바타르. 『팍스몽골리카와 고려』 서울: 혜안, 2009.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성황용. 『근대동양외교사』 서울: 명지사, 1993.

안드레 군더 프랑크 저. 이희재 역. 『리오리엔트』 서울: 이산, 2004.

오카모토 다카시 저. 강진아 역. 『미완의 기획, 조선의 독립』 서울: 소와당, 2009.

이삼성.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1 서울: 한길사, 2009.

『인조실록』

전해중. “『중국적 세계질서』에 관한 학술회의.” 『역사학보』 제29집, (1965)

_____. “한중조공관계고: 한중관계사의 조감을 위한 토론.” 『동양사학연구』 제1집, (1966).

정용화. “조선의 조공체제 인식과 활용.”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7집 2호, (2006).

최소자. 『명청시대 한중관계사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7.

최연식. “조공체제의 변동과 조선시대 중화-사대 관념의 굴절.” 『한국정치학회보』 제41집 1호, (2007).

피터 히더 저. 이순호 역. 『로마제국 최후의 100년』 서울: 뿌리와 이파리, 2008.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서울: 역사비평사, 1999.

- Acharya, Amitav. "Will Asia's Past Be Its Future?" *International Security* 28-3 (Winter 2003/4).
- Betts, Richard K. "Wealth, Power, and Instability: East Asia and the United States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18-3 (Winter 1993/94).
- Chun, Hae-jong. "Sino-Korean Tributary Relations in the Ch'ing Period." In John. K.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 Friedberg, Aron. "Will Europe's Past Be Asia's Future?" *Survival* 42-3 (January 2000).
- Fairbank, John. K. "A Preliminary Framework." In John. K.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 Gilpin, Robert.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 Jepperson, Ronald L., Alexander Wendt, and Peter J. Katzenstein. "Norms, Identity, and Culture in National Security." In Peter J. Katzenstein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 Kang, David C. "Getting Asia Wrong: The Need for New Analytical Frameworks." *International Security* 27-3 (Spring 2003).
- _____. "Hierarchy, Balancing, and Empirical Puzzles in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Security* 28-3 (Winter 2003/4).
- Kennedy, Paul.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New York: Random House, 1987.
- Krasner, Stephen D. "Rethinking the sovereign state model."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7 (2001).
- _____. *Sovereignty: Organized Hypocris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1999.
- _____. "Organized hypocrisy in nineteenth-century East Asia."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 Pacific* 1 (2001).
- Lakatos, Imre.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 In Imre Lakatos and Alan Musgrave (ed.), *Criticism and the Growth of Knowled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 Levy, Jack S. "Qualitative Methods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Frank P. Harvey and Michael Brecher (eds.), *Evaluating Methodology in International Studies*. Ann Arbor: The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2.

- Mancall, Mark. "The Chi'ing Tribute System: an Interpretive Essay." In John. K.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 Mannix, William Francis (ed.). *Memoreis of Li Hung Chang*.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13.
- March, James G. and Johan Olsen. "The Institutional Dynamics of International Political Orders." *International Organization* 52 (1998).
- Mastanduno, Michael and Ethan B. Kapstein. "Realism and State Strategies After the Cold War." In idem (eds.), *Unipolar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9.
- Mearsheimer, John J.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01.
- Roy, Denny. "Assessing the Asia-Pacific Power Vacuum." *Survival* 37-3 (Autumn 1995).
- Shambaugh, David. "China Engages Aisa: Reshaping the Regional Order." *International Security* 29-3 (October 2004).
- Snyder, Glenn H.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36-4 (July 1984).
- Walt, Stephen M.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9.
- _____ . "Structural Realism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25-1 (Summer 2000).
- Wang, Yuan-kang. "The Chinese World Order and War in Asian History." Paper prepared for delivery at the annual meeting for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PSA) in Toronto, September 3-6, 2009.
- Wendt, Alexander. *The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何新华. "试析古代中国的天下观." 『东南亚研究』2006年 第1期.
- 金天. "'华夷观'对古代中韩关系的影响探究." 『社会纵横』2008年 第5期.
- 简军波. "中华朝贡体系:观念结构与功能." 『国际政治研究』2009年 第1期.
- 柯岗安. "中国观野下的世界秩序:天下,帝国和世界." 『世界经济与政治』2008年 第10期.

Inherent Hypocrisy?: A Realist Interpretation of 'the Chinese World Order'

Hongseo Park
(Dongduk Women's University)

The Chinese World Order can be summarized as a hierarchical international system under China, a superpower in traditional Asia. The Chinese World Order, based on the Confucian norm prescribing voluntary hierarchical relations among individuals, assumes China's benevolent assistance to its vassal states in return for the latter's respect to China's suzerainty. However, such ideational logic of Chinese World Order was not consistent with practice; states within the Chinese World Order had repeatedly behaved in a strategic way to maximize their material interests. Particularly, such realistic behaviors had happened more frequently during the period of power transition surrounding China. This means that the Chinese World Order is another "Organized Hypocrisy," as Stephen Krasner expresses in explaining a great gap between the norm of sovereignty and its practice. Moreover, the hypocrisy of Chinese World Order is "inherent" rather than "organized" in that it was unconsciously embedded on the Confucian culture.

투 고 일 : 2010년 6월 22일
심 사 일 : 2010년 7월 9일
심사완료일 : 2010년 8월 2일